

“제도적 장치로 청년 목소리 반영 기대”

김광수 의원, 지방의원 ‘청년의무공천법’ 대표발의… 현재 지방의원 중 39세 미만 3.4% 불과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은 지난 23일,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의무공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 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으며 20~30대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은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벽은 높고 단단해 청년들의 열망과 목소리를 오롯이 받아내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30대의 정치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지만 지방의회만 살펴봐도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해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치형성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

가 정착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다면 침체일로를 걸어 온 생활정치와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의 무공천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 베트남 주석 “진심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베트남전 시기 우리 파병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쩌 다이 광 베트남 국가주석은 우리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며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베트남 정부에 과거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민간인 학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불행한 역사’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광 국가주석과 만나 “보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갈 희망한다”고 과거를 딛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베트남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1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 때 영상 축전을 보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밝힌 메시지는 지난해 ‘마음의 빛’보다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한 단계 진전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장자연 죽음 밝혀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20만 5600여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마감일 사흘을 앞두고 20만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급격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면서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 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정치권, MB구속에 “사필귀정”… “정치보복쇼”

추미에 “적폐정권 막 내려”
박주선 “정치보복 아니다”
조배숙 “사필귀정”
이정미 “정의 막을 수 없다”
홍준표 “정치보복”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적폐청산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사리사욕과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은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막고 구속 수감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최고 위원회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도대체 통이 몇 명이나 구속이 돼야 대안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통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박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을 계기로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부정부패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고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시계를 2007년으로 돌릴 순 없지만 검찰은 MB 사건 진모와 함께 당시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덮여졌는지도 함께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MB구속, 명백하진, 사필귀정이다. 한 줄도 길다는 생각이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의는 결국 강물처럼 흐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행은 헌정사의 마지막

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위대한 권력의 무게를 천근으로 여기는, 거대권력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하고,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라는 3대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 정권의 예상대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국가로 바로잡아 주는 심판 선거가 될 것으로 확실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3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